WTO體制下에서의 通商政策方向

-競爭과 協力의 調和를 추구-

權 坪 五*

1. 머리말

우리 경제는 지난해 2,000억불의 무역규모를 기록하여 세계 12대 貿易國으로 부상하였으며 서비스무역, 기술협력, 해외투자, 외국인투자도 더욱 활발해지는 등 통상활동이 다양화·심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대외무역에의 의존도가 5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통상활동이 다양화되고 깊이가 더해질수록 세계통상활동이 다양화되고 깊이가 더해질수록 세계통상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커지게 된다.

올해는 WTO체제 출범의 元年으로서 세계경제질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GATT시대가 세계시장쟁탈을 위한 제한적 경쟁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WTO시대는 全方位競爭(global competition)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작년 4월 마무리된 WTO협정은 시장접근기회의 확대, 무역규범의 강화, 강력한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어떤 협정보다도 획기적인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WTO체제 출범은 역사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WTO체제의 출범은 세계경제에 적어도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국제무역환경의 개선이라는 國際公共財의 효용을 제공함으로써 세계교역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세계 주요교역국간의 무역불균형문제 등 무역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많으며, 나아가 이들 분쟁을 雙務主義로 풀어보려는 경향 또한 여전히 남아 있다. 선진국들과 개도국들 사이에는 環境, 勞動權保護 등 무역과 관련된 국내정책이슈들이 새로운 통상이슈로 제기되고 있고, 多者主義와의 관계설정이 필요한 地域主義도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무역환경하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갈 통상정책방향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지난 1월 19일 무역협회의 通商産業部 長官 초청 조찬회에서 朴在潤 通産長官은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전개할 「競爭과 協力의 通商政策」방향을 밝혔다. 同 통상정책의 원칙은 금년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당시 실무작업을 담당했던 입장에서 요약·재정리하고자 한다.

2. WTO體制下에서의 새로운 國際貿易環境

(1) WTO體制의 出帆과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최근의 국제무역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

* 通商産業部 産業政策課 事務官

한 변화는 뭐니뭐니해도 WTO체제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48년 이후 세계는 GATT라는 다자간 무역질서에 의한 자유무역주의를 구축함으로써 戰後의 세계경제를 부흥시켜 왔다. 그러나, GATT가 처음부터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당초에는 전후 세계경제 부흥을 위한 1944년의 브레튼우즈협정에 의해 환율안정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중장기 경제개발자금을 공급할 세계은행(IBRD), 그리고 무역자유화를 추진할 國際貿易機構(ITO)의 설립을 계획하였고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관세인하에 관한 선진국간의 협상결과를 기록한 ITO의 부속협정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ITO가 지나치게 자유무역의 理想에 치우친 나머지 개별국가의 主權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과 함께, 미국 의회에서 비준이 거부됨으로써 설립이 무산되자 GATT가 지난 47년간 ITO의 기능을 잠정적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작년 4월 마라케쉬각료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종료되고 미국·EU 등 76개국이 작년말까지 WTO협정에 대한 비준을 마침에 따라 금년부터 WTO가 정식 출범하게 되었는바, 이는 역사적으로 1944년 인류가 계획한 자유무역질서를 47년만에 완성하고 동시에 21세기 자유무역질서를 준비하는 경제사적 의의를 갖는다.

WTO의 출범은 1960~1970년대의 자유무역체제가 1980년대에 와서 보호주의로 변질되어 가던 세계무역의 큰 흐름을 다시 자유무역주의로 회복시킨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WTO는 자유·공정무역을 촉진하고 무역활동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세계경제 및 무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1~2년내에 중국과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면 世界經濟는 명실상부한 「世界」貿易機構體制 아래 大統合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WTO체제의 출범은 세계경제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로, 세계경제가 그야말로 국경없는 地球村經濟(Borderless economy), 무한경쟁(Global competition)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경쟁의 범위가 과거의 국제시장으로부터 국내시장까지, 공산품 위주에서 농산물이나 서비스 등 거의 모든 분야까지 확대되었으며, 관세나 비관세장벽의 축소, 투자 및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진전으로 생산과 마켓팅 등 기업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Globalization이 급속하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경제적 의미에서의 國境의 개념이 사라지고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됨으로써 競爭力의 개념이나 源泉이 바뀌게 되었다. 지난 200여년간 경쟁력이라 하면 국경을 전제로 그저 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는 의미의 比較優位(comparative advantage)와 동일시되었으며, 경쟁력의 원천으로서는 보다 유리한 생산요소나 풍족한 부존자원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적 국경이 없어진데다 생산요소 또한 내것 네것 가릴것 없이 과거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세계적으로 제1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다. 즉, 이제 경쟁력이란 절대적으로 우위(absolute advantage)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고 이는 얼마나 많은 혁신지향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좌우되게 되었다.

세째로, 정부역할에 대한 제약으로 경제운영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가별 관세정책이

제약을 받고, 비관세장벽이 없어지며, 산업지원제도의 운용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幼稚産業保護나 특정산업육성(industrial targeting)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바야흐로 경제주체의 근간은 기업과 소비자이고, 정부역할은 기술개발·교육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소위 企業經濟(Enterprise economics)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2) 地域主義의 확산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多者主義가 강화되고 特惠的·排他的 경제블럭화에 대한 위기감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지만, 隣接國 또는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간의 地域主義化 경향은 오히려 확산·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주의는 본래 2차대전후 경제부흥을 위해 유럽에서 시작하였는바, 1970~80년대에 걸쳐 新보호주의의 대두, 냉전체제 붕괴후의 경제대결 격화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오고 있다. 현재 세계에는 100개 이상의 지역경제통합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금년초만도 MERCOSUR(남미공동시장)가 새로 출범하고 ANCOM(안데안공동시장),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등의 출범준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간 지역경제협력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는 주로 貿易創出效果와 貿易轉換效果를 계량하여 득실을 평가해 온 경향이 있다. 즉, 지역주의로 인하여 당해지역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파생되는 무역수요가 타지역과 교역되던 것을 동일 지역주의 회원국간의 교역으로 전환되는 것보다 큰가 적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 地域主義가 多者主義에 대한 補完的 역할을 추구하는가 혹은 對替的 역할을 추구하는가, 다시 말하면 多者體制를 강화시켜 주는가 혹은 약화시키는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성립된 地域協力體는 일반적으로 多者主義를 보완하고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地域主義는 多者協定에서 다루기 어려운 이슈들의 논의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통상이슈의 국제적 해결방식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多者主義의 實驗場」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域外差別的인 조치들이 摩擦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地域協力 추진에 문제점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주의가 세계교역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체제를 보완하여 다자간 교역질서의 정착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음을 감안할 때, 세계무역질서의 앞날은 WTO체제와 地域經濟協力體와의 相互作用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새로운 多者間 通商이슈(new issues)의 대두

UR협상이 종결된 이후 다수의 새로운 통상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4월 마라케쉬 閣僚會議에서 WTO내에 「貿易·環境委員會」를 설치키로 합의함으로써 「貿易과 環境」문제는 이미 정식 議題化되었으며, 그 외에도 노동기준, 경쟁정책, 투자, 지역주의, 통화금융정책, 개도국 特例問題 등이 향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거론되었다. 이들 중 몇 가지의 새로운 통상이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OECD와 같은 國際機構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왔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들 이슈중에서 環境, 勞動權保護, 投資, 競爭政策과 무역과의 연계문제가 가장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무역환경이 자유화를 향해 중단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들 새로운 통상이슈들에 대한 多者間 論議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환경보호나 노동권의 보호 등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정책목표를 위해 시행하는 조치들이 세계무역의 확대를 저해하고 국가간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우려도 크기 때문에 汎세계적으로 통일된 規範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주요 의제별 논의배경과 주요내용

의 제 별	논 의 배 경	주 요 내 용
환 경	환경보호의 실효성확보 차원에 치중된 환경조치로 세계무역의 확대 저해→무역확대와 환경보호의 조화 필요	-국제환경협약 및 국내환경정책 등에 의한 무역조치와 국제무역규범과의 조화 -환경관련 무역조치의 투명성 -국제환경협약과 국제무역규범의 분쟁해결절차 -시장접근에 의한 환경조치의 영향
노동권 보호	근로자기준이 열악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무역제재를 해야 한다는 선진국들의 주장	죄수·아동노동·강제노역 금지. 노조의 자유활동 보장 등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하는 기본노동권 분야
투 자	UR협상(TRIMs)결과가 경제의 Globalization 추세에 불충분	내국민대우에 기초하여 투자의 명료성 확보, 투자보호규정, 분쟁해결절차 및 공공목적에 의한 예외설정 허용 등
경쟁정책	각국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및 기업관행을 규제함으로써 시장 접근의 실효성 보장	시장에서의 경쟁성, 시장지배력, 기업합병·인수 등에 관한 보편성 있는 원칙 정립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로 개도국을 중심으로 이들이 과연 통상이슈인가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자칫 지난 50여년간 유지·발전되어 온 GATT체제하에서의 自由貿易基調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은 이들 이슈들이 WTO체제하에서 규율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논리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새로운 環境에 필요한 思考(通商政策의 새로운 패러다임)

오늘날 국가간 또는 기업간의 교류관계는 흔히 競爭과 協力의 게임(competitive-cooperative game)으로 理解되고 있다. Lester Thurow가 주장한 바와 같이 'head-to-head' competition으로 표현되는 오늘날의 경쟁환경에서 모든 경제주체는 경쟁적 게임(competitive game)만이 아닌 경쟁과 협력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경제주체가 승리를 얻고자 하지만 게임의 진행을 위해서는 협력이 불가피하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囚人의 逆說(Prisoner's Dilemma)에서 보듯이 모두가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1930년대의 貿易障壁 쌓기식 一方主義가 2차대전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이래 協力이 있어야 競爭도 가능하다는 점은 국제사회의 상식이 되고 있으며, 특히 무한경쟁의 전개와 함께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크게 심화된 오늘날 경쟁과 협력의 조화는 더욱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競爭」에 치중한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輸出에만 치중하고 우리의 시장개방에는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며, 國內産業保護라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국제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통상조치를 취한 나머지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례가 없지 않았다. 開發初期段階에는 교역상대국이나 국제기구가 우리의 이러한 輸出一邊倒式 通商政策을 문제삼지

않았고, 低所得國의 개발전략인 것으로 널리 수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兩者間이나 多者間 논의에서 책임과 역할분담 요구가 높아져 왔다. 그간 우리는 경제적 이유나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요구에 수동적 자세로 대응(reactive)해 왔다. 하지만, 세계 12대 무역국가로 성장한 지금에는 능동적이고 전향적(proactive)인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할 싯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여 정부는 「競爭」과 「協力」을 조화시키는 통상정책을 추구해 나가고자 한다. 상품 및 서비스무역, 기술 및 투자협력 등 여러가지 형태의 국가간 거래에 있어 외국과 「경쟁」하면서, 아울러 보다 장기적인 國益을 도모하고 인류공영을 위해 「협력」하는 互惠的 통상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경쟁과 협력을 조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정부는 첫째, 수출에만 역점을 두지 않고 상대국의 관심도 수용하여 수입시장 개방도 확대하고, 둘째, 상품과 서비스무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기술 등 산업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세째, 다자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후발개도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네째, 이러한 통상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보·인력 등 通商下部構造를 튼튼히 해 나갈 것이다.

4. 通商政策의 展開方向

(1)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함께 생각하는 개방된 通商國家 지향

〈輸出競爭力의 강화〉

WTO體制의 出帆으로 世界交易環境이 개선되어 수출확대를 위한 좋은 여건이 될 것이지만, 輸出競爭力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好機를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世界化는 世界一流를 지향하는 것이며,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바로 世界一流의 競爭力이 전제가 되는 것이다. 輸出競爭力은 저렴한 비용으로 質 좋은 상품을 만들고 효과적인 마켓팅활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競爭力 강화를 위한 각종 産業政策 외에 수출활동을 위한 간접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① 有望輸出商品을 선정하여 품질, 디자인을 개선하고 해외마켓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작년에 一流化品目으로 지정한 반도체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一流化業體를 선정하고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② 「書類없는 무역」을 이룩함으로써 間接費用을 대폭 줄여 나갈 것이다. 輸出承認 및 通關段階까지 시행하고 있는 貿易自動化事業을 화물관리·수입통관·항만물류업무까지 확대하고 무역자동화망을 업종별 산업정보망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③ 「얼굴있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체의 自己商標와 디자인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自己商標의 해외출원지원 및 외국기업에 의한 우리 商標의 盜用防止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輸入의 실질적 自由化〉

우리는 그동안 工産品을 중심으로 한 상품의 수입자유화와 관세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제2의 日本」, 「排他的 保護主義國家」 등 신뢰받는 開放型 通商國家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상당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過

剩保護를 해온 데에도 기인한다. 이제는 우리가 一貫性있는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대한 否定的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투명성도 높여야 할 것이다.

① 對外開放政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현행 101개(수입자유화율 : 99%)의 殘存輸入規制品目중에서 WTO협상결과 및 GATT/BOP合意(89년 10월)에 따라 쇠고기 등 8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輸入規制品目을 97년 6월말까지 연차적으로 자유화해 나갈 계획이다.

② 輸出入公告上에는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으나 個別法(49개)에서 數量規制的 추천제도를 유지하고 輸入資格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금년 상반기중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할 것이다.

③ 輸入先多邊化品目을 과감히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輸入先多邊化制度가 그동안 국산화율 제고, 수입선전환 등에 기여해 온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산업의 對日依存的 구조로 인하여 이와 같은 방어적 대일수입정책으로는 무역역조개선에 한계가 있음도 경험하여 왔다.

정부는 1994년부터 매년 10%씩 多邊化品目을 해제하여 98년까지 절반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금년 상반기중에 204개 依存品目에 대해 품목별 특성과 국산화 수준, 경쟁력 실태, 그리고 해제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多邊化品目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할 예정이다.

〈貿易制度의 선진화〉

현재의 貿易制度와 節次는 2,000억불 시대의 무역규모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管理 및 統制爲主로 운영되어 기업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에 제약이 되고 기업의 附帶費用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수출지원제도는 對外通商摩擦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貿易節次를 간소화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기업의 무역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 대외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는 직접적인 수출지원제도를 國際規範上 허용되는 간접적인 수출지원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① 輸出入承認制度를 현재의 Positive(「원칙승인-예외자유」)방식에서 Negative(「원칙자유-예외승인」)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금년중에는 輸出承認制度의 개편에 중점을 두고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輸出制限品目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병행하여 輸出承認 및 事後管理 免除範圍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② 정부간·민간업계간 협정이나 수출업체간 過當競爭防止를 위한 輸出制限品目(838개 품목)을 전면 검토하여 국제협정에 의한 품목은 2004년까지, 自律規制品目은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출제한을 철폐해 나갈 것이다.

③ WTO협정상 禁止補助金에 해당하는 輸出支援制度(무역금융, 수출손실준비금 등)를 이행기간내에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대신, 그 보완대책으로서 무역어음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출보험과 연불수출금융을 확충할 계획이다.

(2) 貿易增進뿐만 아니라 投資·技術 등 產業協力을 중요시

일반적으로 무역활동이 단순하고 기초적인 형태의 경제교류인 데 비하여 산업협력은 장기간에 걸친 고도의 협력이 요구된다. 또 한편으로는, 產業協力이 촉진되어야 무역이 지속적으로 신장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규모에 비하여 투자활동이 극히 미미한 실정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外國

入投資를 유치하고 우리 기업의 海外投資를 위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주요 국가와의 산업협력활동 지표 비교

	한국	대만	일본	영국	미국
외국인투자금액/GNP(%)	0.3	0.7	0.1	2.5	-
해외투자금액/GNP(%)	1.7	10.0	6.7	27.0	11.2
무역규모/GNP(%)	50.6	73.5	14.2	40.9	16.0

〈外國人投資의 적극적 유치〉

정부가 지원·육성해야 할 기업이 소유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가, 아니면 營業活動領域을 불문하고 내국인이 소유하는 기업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고용·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 內國人所有企業이건 外國人所有企業이건 自國內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각국은 예외없이 外國人投資의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기술축적이 미흡하고 각국의 技術保護政策으로 인하여 선진형 기술도입이 어려우며, 자체개발을 통하여 국내기술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外國人投資가 중요시된다.

첫째로, 外國人投資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 豫示制에 따라 금년초에 총 44개 업종을 추가로 개방하였는데(외국인투자 자유화율 : 90.6%)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하여 97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자유화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 外國人投資企業의 경영활동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外國人投資企業의 금융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高度技術産業분야에 있어서 商業借款 도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光州와 天安에 外國企業專用團地를 조성하여 外國人投資企業이 低價로 공장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勞動法制와 관행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며, 外國人學校나 外國人專用아파트의 건설을 추진하는 등 外國人投資企業 駐在員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째로, 駐韓 外國公館 및 국내진출 외국기업·단체와 정기적인 懇談會를 개최하고 매년 外國人投資企業 實態調査를 실시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海外投資의 활성화〉

무한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생산·판매, A/S망의 구축 등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서의 지구촌화전략이 요청되고 있으며, 여기에 해외투자의 중요성이 있다. 정부는 기업세계화의 중심요소가 되는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① 海外投資 制限業種을 과감히 줄여 나갈 것이다. 현재 重要技術 유출, 過當競爭 방지 등을 위해 20개 업종에 대하여 해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중 나염·폴리에스텔 감량가공·편조업 등 通産部 소관 7개 업종에 대하여는 늦어도 금년 7월부터 해외투자를 전면 자유화할 계획이다. 또한, 海外不動産投資 허용범위도 확대하고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모든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② 해외투자기업의 금융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輸出入銀行의 해외투자자금을 작년의 2,800억원에서 금년에는 4,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특히 이중 일부를 中小企業 專用資金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투자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輸出保險의 海外投資 부보범위를 현재의 非常危險에서 信用危險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③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들이 그간 지적받아 온 현지에서의 勞使摩擦을 방지하기 위해 무역협회 부설 國際貿易硏修院에 해외파견 근무자에 대한 현지문화·商慣習 등의 교육프로그램과 노무관리 敎育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금년초에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行動指針을 제정하여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3) 多者體制의 유지·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수행

우리나라는 先發開途國으로서 국제경제질서와 국제규범, 혹은 「國際競爭의 틀」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만들어 갈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兩者協商方式에 의해서만 通商懸案 해결을 도모하는 것보다는 多者體制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多者協商의 과정에서 그간 개도국으로서의 발전경험을 활용하여 선진국과 후발개도국의 이해를 충실히 조정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多者體制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① 국내법령과 制度를 WTO協定에 일치하도록 개선·보완함으로써 WTO體制가 견고하게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미 작년 定期國會에서 對外貿易法 등 33개의 WTO협정의 이행을 위한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하였으며, 앞으로도 反덤핑 등의 무역제도와 補助金制度도 WTO협정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統一原産地規定의 제정, 海運·基本通信 등 서비스분야의 讓許協商, 迂廻덤핑에 관한 협상 등 국가간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협상이 종결되지 못한 분야의 후속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다.

② 앞서 언급한 새로운 다자간 통상이슈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이들 이슈들에 관한 多者次元의 논의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이슈들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肯定的인 측면과 함께 일부 負擔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WTO나 OECD 등에서의 多者論議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이슈들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견해차이가 큰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이해를 적절히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해 나갈 것이다.

③ 정부는 「新경제5개년계획」에서 밝힌 대로 96년말까지 OECD에 가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OECD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은 개방화·자유화의 세계경제조류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선진국들과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정책협조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금년 3월말 加入申請書를 정식 제출한 후 OECD 諸 規程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금년 하반기부터 OECD와의 가입협의에 착수하여 당초 계획대로 96년말까지 OECD 가입을 차질없이 실현하도록 할 것이다.

④ 앞서 언급한 대로 地域主義가 지나치게 排他的 性向을 갖지 않는 한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촉진시키게 된다는 시각에서 정부는 地域主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현재 어느 지역경제블럭에도 속해 있지 않으며, 亞·太지역에의 정치·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APEC의 성공적인 발전여부가 안보·외교·경제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정부는 APE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域內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89년 출범이래 6년에 걸쳐 상당한 발전을 해 온 APEC은 작년 11월 Bogor 頂上會議에서 域內 貿易自由化 목표년도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이제까지의 느슨한 형태의 協力體에서 벗어나 地域協定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Bogor宣言을 구체화하기 위한 貿易自由化의 對象, 推進方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무역진흥」, 「산업과학 및 기술」 등 분야별 협력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NAFTA와 EU 등 여타 지역경제협력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⑤ 後發 開途國의 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대외지향적인 성장전략을 통하여 1960년대초의 極貧國家에서 탈피하여 先發開途國으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제는 우리의 개발경험을 살려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 낙후된 국가들의 경제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콕협정과 GSTP(General System of Tariff Preference)에 의하여 일부 제한된 국가의 제한된 품목에 대하여 特惠關稅를 공여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를 一般特惠關稅(GSP)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아울러 對外經濟協力基金(EDCF)을 활용하여 후발 개도국에의 公的開發援助(ODA)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⑷ 通商支援體制의 강화

① 通商情報 支援體系를 효율화해 나갈 것이다. 오늘날의 情報化時代에 있어서 해외통상정보의 확보여부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론 기업의 해외진출계획의 성공여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구나, 최근들어 국제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투자협력, 기술교차이용(크로스라이센싱), 戰略的 提携 등 산업 및 기술협력에 대한 해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각급 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가종 통상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유통시키기 위하여 유관기관간 상호 정보교류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국별로 국가정보, 무역·투자·서비스 및 기술관련 정보를 종합 데이타베이스화하여 통상정보의 一括支援體制(one-stop-service)를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② 기업의 世界化를 뒷받침하고 다양화·전문화되는 통상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通商專門人力을 적극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우선 무역협회내의 國際貿易硏修院에 세계화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3개 과정(현재 2개 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 민간분야의 通商專門人力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차원의 통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제통상관련 분야에 대한 國際專門職位를 지정·운영하고 인사상의 우대방안을 강구하면서 海外駐在官 또는 국제기구 등에 파견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상·무역관련 專擔硏修機關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③ 國家이미지 및 통상·상품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이미지

는 국제시장에서 無形의 자산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 상품은 낮은 국가이미지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품질수준에 비해 20~30% 싸게 팔리고 있는 반면에 日本製品은 좋은 이미지 때문에 20~30%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92년부터 추진해온 品質韓國(Korea for Quality) 홍보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기업의 해외홍보활동을 뒷받침하고 국가이미지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업계 등 民·官 합동으로 協議體를 구성·운영하여 중장기 해외홍보전략을 수립·추진해 나갈 것이다.

5. 企業의 對應姿勢

혹자는 WTO체제 출범 전후의 경쟁질서에 대하여 "종전에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링위에 올라가 싸웠으나, 앞으로는 기업만이 링위에 올라가 싸워야 한다"는 말로 요약하기도 한다. 앞서 「Enterprise economics」라는 표현으로 WTO체제하에서 기업중심의 경쟁현실을 말하였듯이,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정책방향은 대내외적인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이러한 규칙안에서 기업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일 뿐, 기업의 성공과 실패, 번영과 衰落은 결국 기업자신의 대응자세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은 WTO협정의 각 분야별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다음 몇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의 경쟁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경쟁력의 확보여부는 발전의 열쇠이기 이전에 생존의 관건이다. 기업들은 리스트럭쳐링 또는 리엔지니어링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적응노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여 사전에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대외개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대외개방이 개방대상업종을 영위하는 특정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개방대상산업이나 우리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강화시켜 주는 가장 효과적인 '경쟁력 강화시책'이 되고, 아울러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의 책임도 다하는 길이 된다. 대외개방을 수동적·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하여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세째, 세계시장을 무대로 기업세계화에 노력해야 한다. WTO체제의 출범은 국가간의 장벽을 없애고 세계 전체를 하나의 지구촌경제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比較優位가 아닌 絶對優位의 확보를 위하여 최적생산요소의 활용을 위한 과감한 Globalization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敵과의 同寢'도 필요한 시점이다.

네째로, 사회적 Needs에 부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외 시장의 구분이 사실상 허물어진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서는 생존과 발전은 전혀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기업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기업경영을 해 왔다면, 이제는 소비자의 이익과 사회적 기여도 동시에 중시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환경보전에의 투자를 확대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이미지를 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